

공 개



의안번호	제 36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 15. (제 1 차)

의
결
사
항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 15.

1. 의결주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8.10.10.~2018.11.6. 기간 중 실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15.1.6.~2018.10.4.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은 미지급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상해간병비, 상해용품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하는 등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379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에 과징금 231백만원을 부과하고

나. 2015.1.8.~2018.9.7. 기간 중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보험자 ◆◆◆ 등 227건의 보험계약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3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과징금 35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및 舊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舊 보험업법 (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2019년도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2019.11.28.) 심의필

<별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과징금 266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5.3.3.~2018.7.30.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19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2015.1.6.~2018.7.31.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73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고

2015.6.1.~2017.11.29.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0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해당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0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2015.1.9.~2018.10.4.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50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해당 보험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는 등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37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무)■■■■■ ■■■■■■보험' 등 2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15.1.8.~2018.9.7. 기간 중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보험자 ○○○○ 등 227건의 보험계약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3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 규정을 위반하였음

(붙임 1)

관계 법규

1.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함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제196조(과징금) ① 9.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법률 제14821호(2017.10.19. 시행)에 해당함

2. 舊 보험업법(2017.10.19. 개정 전 법률)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5조의4, 제98조, 제99조, 제106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생략)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게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음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음

5.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0호, '15.7.1. 시행)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호 바목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 가.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라.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 마. 위반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 바. 그 밖에 위반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최고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 가.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2억원 이하	(1단계)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단계)	×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3단계)	×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4단계)	× 7/80
2천억원 초과	(5단계)	× 7/160

<산정례>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 × 7/10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text{억원}) \times 7/2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text{억원}) \times 7/40$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180\text{억원} \times 7/4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0\text{억원}) \times 7/80$
2천억원 초과	$2\text{억원} \times 7/10$ $+ 18\text{억원} \times 7/20$ $+ 180\text{억원} \times 7/40$ $+ 1,800\text{억원} \times 7/80$ $+ (\text{법정부과한도액} - 2,000\text{억원}) \times 7/160$

6. 기본과징금의 조정 (1차 조정)

가. 원칙

기본과징금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자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단계 조정)

구분	고의	과실
중대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12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보통의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75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경미한 위반행위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50	기본과징금액의 100분의 25

<위반행위 경중의 판단 기준>

위반내용 및 정도	판단기준
-----------	------

중대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보험거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법규의 금지사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규모가 현저한 경우 - 기초서류의 신고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의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익 침해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 경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규모가 미미한 경우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단계 조정후의 기본과징금을 추가적으로 조정한다. (2단계 조정).

위반행위 등의 기간	조정금액
3년 초과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50
2년 초과 3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20
1년 초과 2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10
9개월 초과 1년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100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하	1단계 조정금액의 100분의 25

7.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조정)

가. 일반원칙

- (1) 기본과징금(1차 조정된 기본과징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조정후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 (1)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2) 위반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위반자의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위반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 타

-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준금액이 경미하고 위반기간이 5영업일이내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5.6.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0. 1. 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주의 및 과징금 266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5.3.3.~2018.7.30.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19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2015.1.6.~2018.7.31.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73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고

2015.6.1.~2017.11.29.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0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해당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0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2015.1.9.~2018.10.4.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509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해당 보험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는 등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37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무)○○○○○○○○○○보험’ 등 2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15.1.8.~2018.9.7. 기간 중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피보험자 ◆◆◆ 등 227건의 보험계약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38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손해보험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72	02-3145-7527